

Online Series

2016. 09.09. | CO 16-23

한러 정상회담과 러시아 극동 개발 협력의 의의

현승수(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9월 3일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사된 한러 정상회담은 한국과 러시아가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 없이 당면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재확인했고 러시아는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우리 기업은 약 4,4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연해주를 포함하는 극동 지역은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 때문에 우리에게 블루오션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일 한국의 미래에서 극동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사실 정치와 안보 협력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온 한러 관계에서 경제 협력,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을 매개로 한 협력의 가능성은 그동안 두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도 자주 거론되어 온 화두였다. 서방의 제재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외교적으로도 유럽에서 활로를 찾기 어려운 러시아는, 역동적인 아시아로 협력의 시선을 옮겨 왔고 그 실험대가 극동 지역이다. 그간 푸틴 정부는 극동 개발을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개방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인구가 희박한 극동이 자칫 중국의 독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 측의 투자와 협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이른바 3각 경협 사업을 통해 극동의 풍부한 자원을 한반도에 공급하는 데 관심을 보여 왔다. 동 사업의 성공은 러시아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이익도 가져다 줄 터였다.

하지만 적지 않은 협력의 아이템들이 제안되어 온 사실에 비하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야겠다. 러시아 정부가 보여주는 의욕에 반해 그곳의 변화는 아직 더디며, 감소하는 인구와 관료주의의 폐단, 불합리한 제도 등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선뜻 투자를 결심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정치·구조상의 문제들이 극동 개발을 저해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올 1월부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유일한 남·북·러 경협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중단됐다. 러시아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안에 대해 추가 조항을 요구하면서까지 남·북·러 경협을 살려보려 시도한 만큼, 실망도 대단히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북한을 경제 협력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당면한 동북아의 안보 환경 속에서 남·북·러 경협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전망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경제를 통한 협력과 상생을 논하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한리는 일단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양자간, 다자간 협력에서 북한을 우회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극동 지역에서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점화된 극동 개발 협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제안은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경제적 협력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첫째, 앞서도 전제했듯이 북한을 우회하는 경협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한·중·러, 한·일·러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에 기초한 협력의 플랫폼이 마련되면 경제적 협력 이상의 안보적 안전 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러시아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은 소다자주의 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며, 동 포럼을 정상회담의 기회로 활용한 한리 정상은 선택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남·북·러 삼각 경협 실현은 경제적 실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참가국 모두의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제안해 왔지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메가 프로젝트들, 즉 남·북·러 가스관과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 사업 역시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연후에 그 경제적 가치를 따져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활발한 경협이 추진되기는 어렵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 북핵 불용과 대북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결국 극동 개발 성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러시아가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러시아 극동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지대’로 발전하는 방안을 한러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극동 지역은 북한은 물론 중국, 몽골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바다 쪽으로는 한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동해 실크로드의 핵심 지대이다. 극동이 떠오르는 북극 개발과 연계를 모색하면서 생태와 환경을 모토로 한 다국간 경협을 성공시킨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됨은 물론, 그 사례를 전 세계로 발신하여 21세기 개발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제시할 수 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극동은 한러 협력의 출발점이자 통일 한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넷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핵 위기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면목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번에 한러 양국 정상이 합의한 다양한 협력 안건들은 유라시아라는 큰 바퀴를 움직여 한반도라는 작은 바퀴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혹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유라시아 경제 통합 구상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다자 협력이 러시아의 극동 지방을 중심으로 논의 및 전개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안보와 정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한러, 한·중·러, 더 나아가 남·북·러, 남·북·중·러의 경협 비전은 지속적으로 구상되고 추진될 것이다.

북핵 위기 이후 오히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다자적 노력 속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러 관계가 더 만성화되기 전에,

또 ‘한·미·일 대 북·중·러’ 식의 냉전 구도가 이 땅에 고착화되기 전에 지금 전환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2차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한러 정상회담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한러 협력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인식차를 좁히고 상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